



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8.19) >

◆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.. ‘전기차 포비아’ 대책 추진

<보도 주요내용>

8.19.(월) 한국경제는 「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.. ‘전기차 포비아’ 대책 추진」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,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	(044-201-3827)
		담당자	사무관	서혜린	(044-201-3846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이영호	(044-203-4320)
		담당자	서기관	김효선	(044-203-4326)